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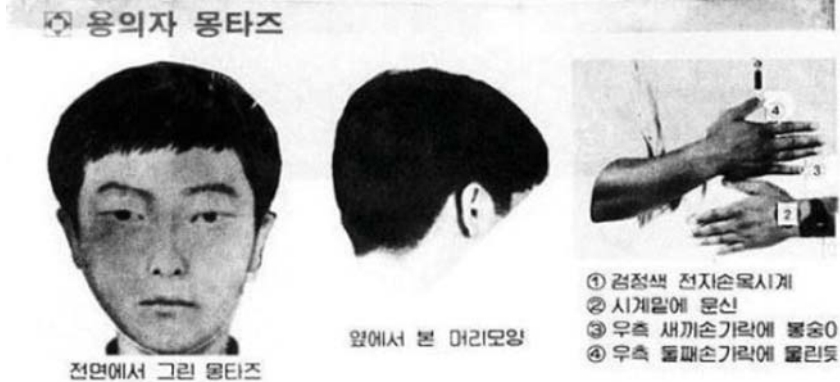
경찰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DNA, 희생자 유류품 3건과 일치”

경기남부청 “유력 용의자 50대男 복역 중...범행 부인”

“수사관·전문가 등 57명으로 구성 수사본부 가동”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찾습니다

현상금 500 만원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특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986~1991년 경기도 화성군 태안을 반경 2km이내에서 6년 동안 10명의 여성이 희생된 희대의 연쇄살인사건이다.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역대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인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됐다. 경찰이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인물은 강간과 살인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남성의 DNA와 3명의 희생자 유류품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이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그러나 용의자의 DNA가 몇번째 피해자의 DNA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기초단계란 이유로 밝혀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반기수 2부장 주재로 수사진행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3건의 현장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이라며

“용의자는 50대이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밝혔다. 반 부장은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진실규명 차원에 당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관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체포들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DNA 분석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검정해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올 7월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수사진행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용의자의 DNA가 몇번째 피해자와 일치하는 지에 대해서도 (국과수)감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이란 이유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 반 부장은 “우리가 사실은 DNA 감정결과를 통보받고 기초 수사를 하는 단계다.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득이하게 마련한 (브리핑) 자리이다. 언론에 제공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사기록도 반대하고 증거물의 양도 많아 지금도 감정이 진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정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알려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으로 경찰은 수감자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히고, 전담반을 꾸려 용의자를 상대로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행 중”이라며 “(수사진행 내용을) 말하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기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배운 주 청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이어갔다. 배 청장은 “DNA가 나왔다고 해서 (사건을) 종결하기 어렵다. (반대한 수사) 자료를 분석해서 충분히 진범을 가려 내겠다”며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DNA 결과 이후 대상자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반드시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매주 목요일 정기적 브리핑을 열어 수사진행 상황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2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고, 미제사건수사팀, 광역수사대, 피해자

보호팀, 진술 분석팀, 법률 검토팀, 외부 전문가 자문 등 57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가려낼 방침이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6년간 경기도 화성지역에서 10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전 국민적 충격을 준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꼽힌다.

화성 연쇄살인 33년만에 용의자 특정...광주·전남 미제사건에 ‘관심’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33년만에 특정되면서 광주·전남지역 18건의 미제사건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광주와 전남 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광주경찰

청은 11건의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광주 북구 모 교회 주차장에 발생한 50대 회사원 둔기 피살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CCTV 영상을 확

보해 분석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용의자 특정에 실패했다. 이후 새로운 수사기법을 활용, 영상을 재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10월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식당에서도 60대 남성이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15년 9월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됐던 남성을 검거했지만 족적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사가 난항

에 빠졌다. 또 지난 2005년 5월 발생한 광주 광산구 주유소 살인사건과 2004년 9월 북구 용봉동 여대생 테이프 살해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에서는 7건의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2009년 6월 14일 발생한 이른바 ‘광양 주차장 살인사건’을 다시한번 살펴보고 있다. 사건 당시 붙잡혔던 용의자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2008년 9월 나주에서 속옷만 입은 채 변사체로 발견된 40대 여성사건을 비롯해 2007년 1월 화순 80대 독거노인 살해사건, 2005년 5월 순천시 외서면 농수로에서 60대가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미제사건은 그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범죄나 사고를 말한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개시 후부터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있는 모든 사건을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한다. 현재 2015년 8월 1일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어졌다. 다만 2000년 7월 31일까지 발생한 살인사건은 그 당시 형사소송법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규정했으므로 2015년 7월 31일자로 모두 시효가 성립돼 살인사건의 경우는 비록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사건이 오래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증거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